

안녕하세요~ 모든문제연구소 캠페이너?

- 현 민생경제연구소장,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상지대 초빙 교수, 전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애인자립대학 강사,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집행위원장,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참여연대 민생팀장, 2000년 총선연대 낙선운동 간사, <되돌아보고쓰다-가난한이들을위한민주주의> 저자, 전 성공회대 교수, 4.16연대-인권재단사람-군인권센터-인권연대-인권운동사랑방-민언련-문화연대-민족문제연구소-참교육학부모회-녹색연합 회원

- 통일맞이 운영위원, 전 참여연대 통일희망모임 총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 평화네트워크 회원,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 통신비인하캠페인단, 장애인인권포럼 이사,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회원, 청년유니온-민달팽이유니온-KYC회원, 나눔문화-세이브더칠드런 회원, 청소년쉼터협의회 이사, 부장 검사 승진 예정자 교육 강사

- 강동시민연대-강동희망나눔센터-강동송파열린사회-강동송파교육희망네트워크 회원, 맘상모 회원-전국유통상인연합회 및 한상총련 자문위원 등

무엇이 창조이고 혁신이고 이노베이션일까요?
각자의 영역에서 새롭게! K-입법K-집회의 탄생



줌-온라인행동 사이트-유튜브연합으로 수만명의 동시집회 및 연인원 백만명 안팎의 대규모 집회를!

2:53 www.candleaction.net 15

현재 참여자수 : 47명

조선일보는 대선에서 손떼라!

후원계좌 : 국민은행 584101-01-191121 양희삼(카타콤)



공익과 약자들을 위한 새로운 활동이 사회 혁신!

세입자114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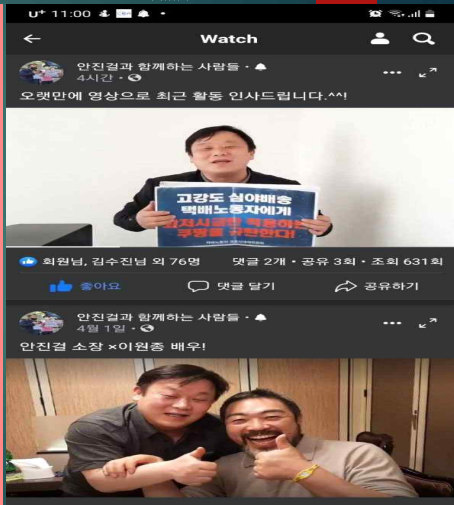
☎ 010-4794-0114

평일 오전 10시~낮 12시

주택 임대차 분쟁 중인
수도권 세입자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전화

문의 tenants114@gmail.com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무료로 법률 상담 해드립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창립 5주년, 시민들과 약자들을 위한 꾸준한 동행에 감동받습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개

민변은 지난 2016년 진보적 법률가단체의 시민인 공익인권변론을 제대로 수행하고, 그 성과를 축적하기 위하여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시민이 권력이나 자본의 횡포와 횡포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건, 사건의 해결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사건을 변호사들이 모여 고민하고, 연구하며, 함께 사건을 해결해자는 것이 변론센터의 설립목적이자 목표였습니다. 지난 5년간 280여건의 소송을 공익인권변론사건으로 정해 5,000명이 넘는 시민들을 변호했습니다. 경찰고사 출신자들이 교육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는데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위헌 결정을 받았고,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의 위법성을 소송을 통해 밝혔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맞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지난 5년을 뒤돌아보며, 더 많은 시민들과 변호사들의 참여 속에서 보다 완성된 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려 합니다. 공익인권변론센터는 회원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통해 앞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파수꾼이자 인간다운 삶의 든든한 다짐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으리라 자부합니다.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김철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주요 변론사건

2016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사건**
정확의 살인자,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들과 함께 연대하다.
- **차별의 문턱을 없애라 -**
검정고시 출신 교대 수시입학 차별 위한 결정
검정고시 합격자는 교대 수시입학 기회를 박탈한 차별적 입학전형을 바꾸어 내다.

2017

-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가배상청구 사건**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다.
- **한국의 '나, 다니엘 배레이크' 사건 -**
자살근로자 사망 국가배상청구
일을 할 수 없는 병든 수급자에게 일용 강요하는 조건부 수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의 책임을 확인하다.

2018

- **인종차별철폐법 제정 위한 외국인 HIV 강제검사 국가배상청구**
UN인권규약을 통해 외국인 고사에게는 HIV 검사를 강제한 인종차별 제도의 위법성을 확인하다.
- **군영장 제도 위헌재정 및 피해자 지원**
헌법의 근거없이 운영된 군영장 제도를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다.

2019

- **위법한 해외입장 파해자 국가배상청구 사건**
과거 이동인권을 위반한 위법한 해외입장에 대해 국가와 입장기관에 책임을 묻다.
- **새밀로 진상규명과 국민 고소/교발 법률지원**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새밀로 형사와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계속한다.

2020

- **국가보안법 제7조 위헌소송**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헌로 끝까지 간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박탈하고 명목통일을 가로막는 악법 중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 **인공지능 알고리즘 정보공개 청구 사건**
인공지능(AI)을 채용과 평가 도입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신빙기준 알고리즘 공개를 요구하는 새로운 양의 공익소송을 제기하다.

숫자로 본
공익인권
변론센터
5년

280건

5년 동안 지원한
공익인권변론



변론을 지원받은
시민
5,476명



시민들에게
지원한
변론기금

총 3억 원
연평균 6,000만 원



변론센터는 공익인권소송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다양한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송자료를 위한 디지털도서관 (lib.minbyun.or.kr)에 축적하고 있습니다.

알바생 아닙니다~ 알바노동자가 맞습니다!
4대 사회보험+장기요양보험+알바노조 참 귀중~

알바들의 5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알바노조**

무료노동상담 010 - 9869 - 0114 카카오톡 채널상담



이슈이슈
올해만 15명 '택배 잔혹사 실체'



“저 너무
힘듭니다”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

"상자 손잡이 만든 뒤 자세 개선하면
중량 38.7% 감소 효과"

생산자





주: 한미연대 서울사무소

TEL: 02-723-4251

회원가입
02-723-4251

조합원은 20%
비조합원은 50%

학부모동지 과로사 대책위원회

본사는 50%만

나머지는
알아서

학부모동지 과로사 대책위원회

김민호

김민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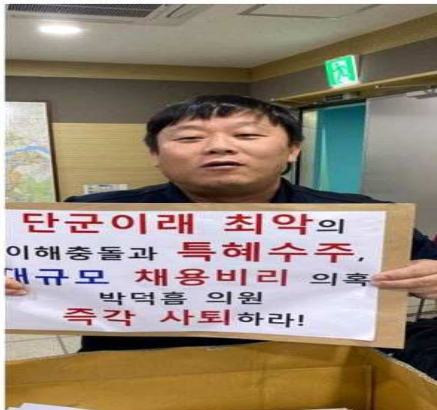
김어준의 뉴스공장

23시간 · 🌐

‘택배기사 과로사’ 택배업계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합니다 🙏

택배 상자에 손잡이도 꼭 필요하다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인터뷰였습니다.
(feat. 박덕흠 의원 사퇴 피켓)



28-2828

한의원
박동호치과 의원

28-2828

주정차금지

전원지역



죽음을 부르는 장시간 노동 OUT, 저녁이 있는 삶 쟁취!
택배노동자의 권리, 노동조합으로 함께 찾읍시다!!

무료 법률상담 및 가입문의 : 민주노총 서울본부 1577-2260

ADR





백남석악, 사물놀이, 한국, 그루브

G. Puccini

소득
4분위

소득
4분위

소득
3분위

소득
2분위

소득
1분위

경제민주화
119

경제민주화119 선포단

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 <11월 9일 경제민주화의 날 선포> 기자회견

일시·장소 2020년 11월 9일(월) 오후 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재벌

감질

개헌

경제

타파

상생

제민

심

주

화

경제민주화119 선포단

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 <11월 9일 경제민주화의 날 선포> 기자회견

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

서 한국이 1위)

대해
세요.

국회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하는 5대 입법과제 통과시켜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하라!
가맹사업법 · 대리점법 개정하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하라!
음식원산지 표시법 제정하라!



단체교섭권 보장하고
계약갱신권 보호하는

가맹 사업법

개정하라

온라인 플랫폼
갑질 근절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하라

의무휴업 대상 확대하고
대형유통점 규제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하라

차임감액청구권
현실화하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강화하라

단체교섭권 보장하고
영업구역 보호하는

대리점법

개정하라

소상공인 보호하는

공산품 원산지 표시법





소확행위원회

작지만 확실한 행복

출범식



● 일시 | 2020. 11. 9(월) 오후 2시 5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서울시 마을노무사 사업 서울 전지역 확대시행



노동법을 잘모르는 소규모 사장님,
무료 방문 컨설팅 받아보세요!

마을노무사란?

소규모사업장에서 노동법을 잘몰라 범위반이 되지 않도록



스트레이트

코로나19인데
"임대료 2배 올립니다"

소음과 직원의 욕설 등으로 고객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MBC


4. 이에 당사에서는 귀사에 타 입주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정상화하는 것으로 결정하

임대료 및 보증금 인상의 전

- 아 래 -

기간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현 행	조정안	현 행	조정안
2020년 8월 30일 ~2021년 8월 29일	11,300,000원	25,671,200원	271,200,000원	616,108,800원

5.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억수주
부정채용
정치자금법위반
박덕흠 의원
사퇴하라**

그것이 알고 싶다

SBS

금년 1월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2007년

나경원

내가라는 주어가 없잖아요

... BBK를 설립했다

무슨 행사인 줄 모르고 갔어요
이번에는 목적어가 없네!

나는 ??에 갔다
(자위대 기념식)

하하하

둘은 10년 뒤 모두 구속됩니다..

#서로의_약점을_정확히_지적한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두 전직 대통령' 발목 잡은 10년 전 공방

MBN
LIVE



"최태민 목사 일가에 의한
국정농단 개연성 없겠냐"

"최태민 문제 두고두고
금생동안 지고 가야 할 업"

"도곡동 땅, BBK 등
인신구속이 가능한 게이트"

"'다스 부동산 매입' 의혹
실정법 위반으로 수사 할 대상"

BBK · 다스
실소유주 논란 여전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 수사 중

추 장관 아들 의혹 VS 박덕흠 의원 보도량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22일간 2만2,000건

VS



이해충돌 의혹 박덕흠 의원
31일간 2,300건




**수천억수주
부정채용
정치자금법위반
박덕흠 의원
사퇴하라**

이해충돌
수주의혹
**가족회사
수천억
수주의혹
박덕흠의원
사퇴하라!!**

6주기 추모제



일시 : 2020년 11월 7일(토) 오전 11시

자료 : 경기도 내야조식 및 신품작곡의 연식무늬



대학노조 창립22주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이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다!

|일 시 2020년 11월 6일(금) 11시 |장 소 국회 앞 |주 체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11월 6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중편은요

8시 30분 출연



진행 박시영
원지코리아컨설팅 대표



고정패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



고정패널 남영희
민주당 인천동구마추홀구 위원장

연장은요

9시 30분 출연



고정패널 안진결
미래경제연구원 교수장



출연 이광석
가수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 출범식

• 일시 | 2020. 11. 9(월) 오후 2시 5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이제 집에
두고 가지 않을게
**반려동물 동행
시설 안내 서비스**

더는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여성 화장실
확대**

이제 집에
두고 가지 않을게
**반려동물 동행
시설 안내 서비스**

**교통비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최우선과제]
**무거운 상자에
손잡이를**

[최우선과제]
**대출도
확해될 수 있다**

**입사 시험 및
면접 비용은
'예비 사용자'가**

더는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여성 화장실
확대**

[최우선과제]
**하의개충
통신비 관련
신청 없이 바로**



논산독서협회와 함께하는

인문감성복콘서트

인문도시추진사업단

가난한 이들을 위한 민주주의,
되돌아보고 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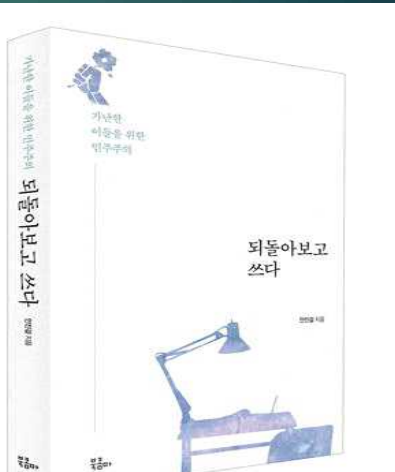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일시: 2019.03.27 (수) 19:00~21:00

장소: 건양대학교 희영문화홀



“되돌아보고 쓰다” 책 인세는 모두 시민사회-공익단체들에 기부 중예요~ 기부는 민주공동체의 기본!



안진걸의 'TV 민생연구소', 방심위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비정규직 애환 현실감 있게 전달"



시민사회는 오로지 공익과 사회경제적 약자의 편!

- ◆ 명절 거북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중교통 조조할인제, 지하철 잡상인 명칭을 '이동상인'으로 변화, 영화관 폭리 및 부조리 개선 운동 중
- ◆ 이동통신비 인하 운동 지속. 점진적인 요금 인하, 발신자표시 서비스 무료화, 음성-문자 무제한 요금제, 이동통신요금원가 정보공개 공익소송 승소, 65세 노인 1인당 12,100원 통신비 감면 조치(2018년 7월부터), 이동통신 가입시 보조금 대신 선택약정요금할인제도 도입(25%로 요금 할인을 상향)
- ◆ 반값등록금 투쟁->국가장학금 신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등록금인상율상한제, 학자금 이자율 1.7%로, 학자금 이자지원조례제정, 대학입학금 전격 폐지, 상지대-수원대-성신여대-덕성여대-경주대등 사학비리 추방운동
- ◆ 대형마트-SSM 등 한달 2회 의무휴업제도 도입, 중소기업인-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대폭 인하, 제로페이 확산운동, 지역화폐 활성화,갑을 문제 해결 운동, 이명박 자원외교 사기 및 혈세탕진 대응 등
- ◆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예대마진 폭리 규탄 운동, 금융소비자 보호 캠페인

“평범한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주의를 넘어, 가난한 이들을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 오로지 주권자 시민들을 위하여. 평범한 국민들이 주인 되고 대접받는 나라, 즉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시민민주주의의 나라로!
- 더 나아가, 지금의 심각한 양극화·불평등·민생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즉, 우리의 민주주의가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을 넘어 “가난한 이의, 가난한 이들에 의한, 가난한 이들을 위한(Of the poor, By the poor, For the poor) 민주주의로 나아가야..그것이 더 좋은 민주주의, 더 강한 민주주의, 지속 가능하고 생동감 넘치는 시민 민주주의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2021년 현행 대한민국 국가장학금 지원 현황

	소득분위 구분	학기별 지원금액	1년 총액	
“대학생들과 학부 모들, 그리고 교육 시민단체-민생복 지단체들의 반값등 록금 투쟁이 만들 어낸 놀라운 변화 : 국가장학금 1유형 (국가장학금 2유형 은 각 대학들이 학 생들에 추가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260만원	520만원	
	소득 1구간(분위)	260만원	520만원	
	2구간(분위)	260만원	520만원	
	3구간(분위)	260만원	520만원	
	4구간(분위)	195만원	390만원	
	5구간(분위)	184만원	368만원	
	6구간(분위)	184만원	368만원	
	7구간(분위)	60만원	120만원	
	8구간(분위)	33.75만원	67.5만원	

등록금과 교육비 문제 해결 위한 투쟁은 국가 예산에 대한 주권자들의 절박하면서도 합리적인 의견 반영으로 이어져...
친환경무상급식과 함께 민생복지국가로 향하는 계기가 됨!

- 우리나라도 2012년부터 무상지원 국가장학금 시행 중
- 국가의 민생복지 확충을 위한 대표적인 예산이 바로 반값등록금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 : 2019년 현재 국가장학금 지원액은 3.9조원쯤. 그러나 대학생의 절반과 대학원생 전원은 국가장학금을 한 톨도 못 받고 있어 큰 문제... 신속히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소득기준, 신청기한 등 폐지 내지 개선하고, 이제는 대학 무상교육으로 나아가야!!
- 요즘 미국도 대학무상교육 확산/학자금 탕감 캠페인 중

서울시립대는 입학금 0원, 이과122만-문과102만원

등록금납입사실증명 (교육비지원신청용)

등록일자 : 2018-02-02

모집단위 :
학 년 : 3
성 명 :

등록금	계	:	1,228,500원
	입학금	:	0원
	수업료	:	1,228,500원
	기성회비	:	0원
장학금	계	:	0원
	입학금	:	0원
	수업료	:	0원
	기성회비	:	0원
납입액		:	1,228,500원

위와 같이 2018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납입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02월 02일
신청인 :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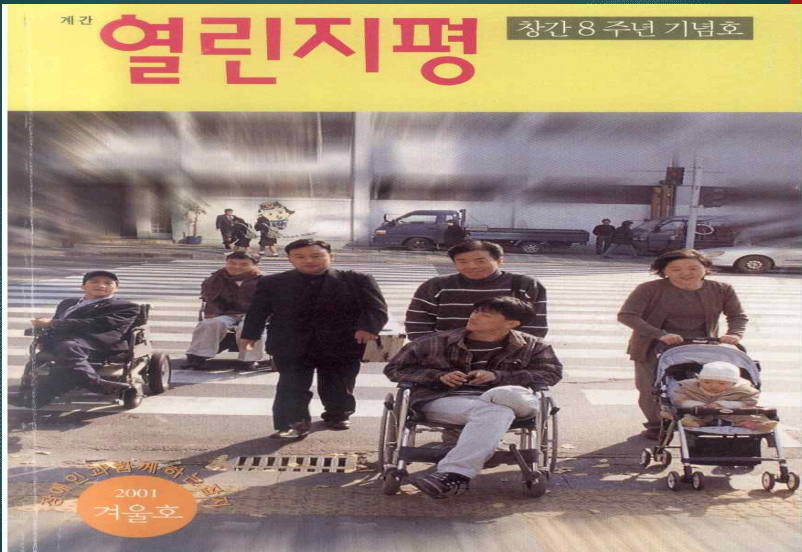
신청인의 2018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납입내역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NGO와 NPO-한국 시민사회운동이 만든 변화들

- ◆ ‘스크린도어’가 가져온 놀라운 변화, 전철 손잡이의 진화,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가져온 변화 : 비장애인 편의까지 확장, 화장실의 놀라운 변화와 시민운동, 제2의 WTO도 한국에 설치 될 정도
- ◆ 희망제작소와 사회창안 캠페인, 시민제안 운동 : 유통기한 표시 제도 개선, 신용카드 사용액 및 누적 사용액 알려주기 캠페인 등
- ◆ 문자요금 30원에서 20원으로 인하, 이후 무료화, 10초당 과금되던 통화 요금을 1초당 과금으로, 해외로밍요금 인하 캠페인 등
- ◆ 안국동 5거리 육교 철거와 무장벽 캠페인, 광화문 일대의 변화
- ◆ 인권을 씹시다 프로젝트 : 우와, 공원에, 전철역에 세계인권선언문이! 우리나라 전철역은?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 :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 받았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 희망제작소의 국민 보행권을 되찾자 캠페인
- ◆ 주거지 및 학교 부근 도심도박장 반대 및 추방 운동 전개 등등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앞에 육교가..육교를 없애라!



화장실로 보는 시민단체들의 공익 활동

- ◆ 공중화장실법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 제7조의2(어린이용 대·소변기의 설치 등) ①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화장실 의무적 설치 및 개선도 진행 중!

남자들이여, 앉아서 '일' 봅시다(한겨레 2006.11.27)



‘일보 전진(一步前進) 문명 일진(文明一進)’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한걸음만 앞으로 다가와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좋은 사회를 위한 시민사회의 도전!”

시민사회운동 : 애드보커시+캠페인+정책활동!!

- ◆ **advocacy** : 지지와 변호라는 뜻. 한국사회에서는 어떤 의제를 대변하고 옹호하고 주창하고 촉구하고 호소한다는 뜻으로 사용됨. 그렇다면 시민사회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좋은 의제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애드보커시와 정책 활동, 이를 계속 공론화하고 개혁과 변화를 일궈내기 위한 캠페인의 연속으로 이해 가능. 즉,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 정부, 국회, 언론과 소통하는 과정 그 자체라고 봐도 무방할 듯 해요.
- ◆ 돈과 이윤이 아니라 사람과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사회를..”또 다른 세계는 가능합니다!!” 곡절 많은 한국사에서는 사회운동이나 투쟁, 실천이라는 용어라도 사용되지만, 공익활동 및 공공 캠페인은 응원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1시민 1단체 후원~

국가와 시장을 감시견제하는 시민사회-생활세계



시장의 강자, 경제권력의 남용과 횡포 꼭 근절해야!

2019년 자산총액 상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업집단명	동일인	소속회사수(개)	자산총액(공정자산), 단위:조원		기업집단명	동일인	소속회사수(개)	자산총액(공정자산), 단위:조원
1 삼성	이재용	62	414.5	조원	18 대림	이준용	26	18.0
2 현대자동차	정몽구	53	223.5		19 미래에셋	박현주	38	16.9
3 에스케이	최태원	111	218.0		20 에쓰-오일	에쓰-오일	3	16.3
4 엘지	구광모	75	129.6		21 현대백화점	정지선	28	15.3
5 롯데	신동빈	95	115.3		22 효성	조석래	57	13.5
6 포스코	포스코	35	78.3		23 한국투자금융	김남구	30	13.3
7 한화	김승연	75	65.6		24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5	13.0
8 지에스	허창수	64	62.9		25 영풍	장형진	24	12.0
9 농협	농협	44	59.2		26 하림	김흥국	53	11.9
10 현대중공업	정몽준	31	54.8		27 교보생명보험	신창재	14	11.7
11 신세계	이명희	40	36.4		28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27	11.4
12 케이티	케이티	43	34.0		29 케이티앤지	케이티앤지	11	11.2
13 한진	조원태	32	31.7		30 코오롱	이웅열	41	10.7
14 씨제이	이재현	75	31.1		31 오씨아이	이우현	19	10.7
15 두산	박정원	23	28.5		32 카카오	김범수	71	10.6
16 부영	이종근	24	22.8		33 에이치디씨	정몽규	24	10.6
17 엘에스	구자룡	53	22.6		34 케이씨씨	정몽진	15	10.4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NEWSIS

재벌대기업 총수들의 비리, 횡포, 갑질 근절해야!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 짓밟는 모든 갑질 추방해야!!

In the latest incident, Cho Hyun-min, who now oversees marketing at the airline, was accused in news reports of throwing a cup of water at an executive for an advertising company during a meeting. The incident was cited as an example of what South Koreans call “gapjil” – the abuse of underlings and subcontractors by executives who behave like feudal lords.

갑질 근절
인간의 존엄성
지킴이

Sister of Korean 'Nut Rage' Heiress Accused of Throwing

By CHOE SANG-HUN | APRIL 13, 2018



Cho Hyun-min has apologized for “foolish and reckless behavior,” but her company, Korean Air, denied that she threw water in an advertising executive’s face. Yonh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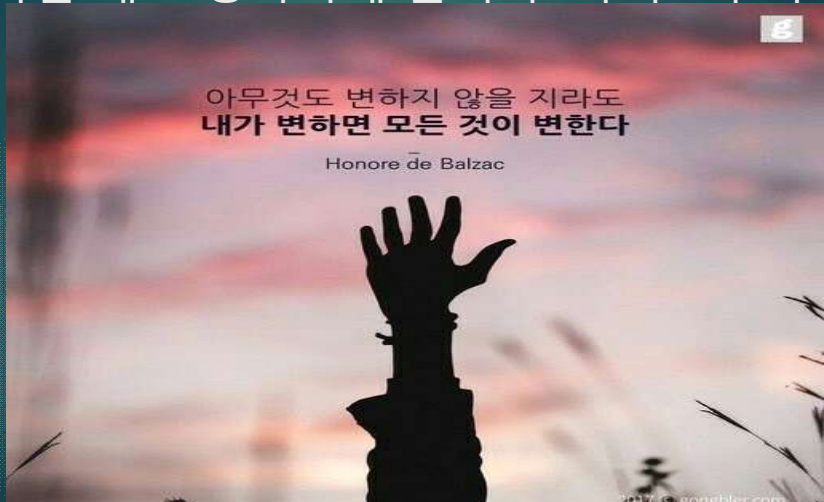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더 이상 방 치해서는 안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절실!!

-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리포트 2018-8에 의하면 500대 기업의 매출 중 5대 재벌 소속 계열사의 비중이 2007년 33.9%에서 2017년 39.3%로, 20대 재벌의 비중은 51.9%에서 59.7%로 높아졌음.
- 또한, 5대재벌 계열사 추이는 2007년 79개(15.8%)에서 2017년 93개(18.6%)로 증가, 이를 포함한 20대 재벌계열사는 같은 기간 146개(29.2%)에서 182개(36.4%)로 증가했고, 20대재벌 계열사의 매출 비율은 51.94%에서 59.70%로 증가함으로써 상위재벌로의 경제력집중 현상이 관측되고 있음.

경주 최부자 덕의 교훈은 지금도 큰 감동과 울림!

- 1)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권력을 탐하지 말라는 뜻)
- 2) 재산은 만 석 이상 지니지 마라
(욕심을 부리지 말고 사회에 환원하라는 뜻)
- 3)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인정을 베풀어 적을 만들지 말라는 뜻)
- 4) 흥년기에는 땅을 사지 마라
(가진 자로서 없는 자를 착취하지 말라는 뜻)
- 5) 머느리들은 시집온 후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검소하게 절약하라는 뜻)
- 6) 사방 백 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상부상조하고 상생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책무를 다하라는 뜻)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생각한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로부터 **의혁명!**




평화적 방법에 의한 평화! 비폭력 저항의 상징 간디!

인도 야무나 공원의 마하트마 간디의 추모공원에는
간디가 말한 「7가지 惡德(악덕)」이 있다

철학 없는 정치
도덕 없는 경제
노동 없는 부(富)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윤리 없는 쾌락
헌신 없는 종교

자유-평등-박애! 인류의 이상을 담은 프랑스 국기



- 
- ▶ Allons enfants de la Patrie, 가자 ! 조국의 아이들이여
 - ▶ Le jour de gloire est arrive ! 영광의 날이 왔도다!
 - ▶ Contre nous de la tyrannie, 우리를 향해 폭정으로부터
 - ▶ L'etendard sanglant est leve, 피로 물든 창이 일어섰다.
 - ▶ L'etendard sanglant est leve, 피로 물든 창이 일어섰다.
 - ▶ Entendez-vous dans les campagnes 들리는가? 들판에서
 - ▶ Mugir ces feroces soldats ? 저 흉폭한 적들이 질러대는 소리가
 - ▶ Ils viennent jusque dans vos bras 그들은 당신들의 품 안에까지
 - ▶ Egorger vos fils, vos compagnes ! 당신들의 아이와 아내의 목을 따러 온다
 - ▶ Aux armes, citoyens 무기를 들라, 시민들이여
 - ▶ Formez vos bataillons 전투부대를 편성하라!
 - ▶ Marchons, marchons ! 나가자! 나가자!
 - ▶ Qu'un sang impur 적들의 더러운 피를
 - ▶ Abreuve nos sillons ! 우리의 밭에다 뿌리자! “어느 나라의 애국가일까요?”

프랑스대혁명의 자유-평등-박애는 NGO의 이상

- ◆ 프랑스 국기와 프랑스 애국가의 의미 : 블루-화이트-레드의 삼색기는 각각 자유 평등 박애의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을 의미
- ◆ 프랑스 애국가 들어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weg6MGwmuYA>
- ◆ 평등이란 무엇인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 ◆ 인류의 역사는 자유, 평등, 박애를 위한 사랑과 노동과 투쟁의 역사
- ◆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3L은 무엇일까요? 리버티, 러브, 레이버
- ◆ 우리에게 "랜드 앤드 프리덤 " 과 "빵과 장미"를 달라!
- ◆ 인간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 인간 존엄성 실현을 위한 역사, 꾸준히 노동하고 생산하고 분배하는 과정에 벌어지는 사람들의 역사
- ◆ 역사란 무엇인가? EH 카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 라고 해석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공화국 프랑스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알베르 카뮈(1913~1960)
나치부역자 숙청 반대 여론을 잠재우며



스웨덴, 덴마크 등 복지국가 및 휴머니즘의 나라

- ◆ 영국 2차 세계대전 후 베버리지 보고서 : “요람에서 무덤까지”
- ◆ “평등이 최고의 효율!”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많은 국민들의 한탄과 유머 “우리도 복지병 한 번 걸려봤으면...” “국가는 국민의 집이 돼야 ”
- ◆ 돈 낸 만큼 치료받을 것인가? 아픈 만큼 치료받을 것인가? 돈 낸 만큼만 교육받을 것인가? 필요하고 원하는 만큼 교육받을 것인가?
- ◆ 존 롤스의 정의론 : 공정으로서의 정의, 마이클 샐던 정의란 무엇인가?
- ◆ 기업의 사회적 책임-사회공헌을 넘어서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의 발전
- ◆ 대형마트와 SSM사태, 통 큰 치킨 사태 논란 : 우리 헌법과 경제 민주화
- ◆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아동, 어린이, 학생부터, 노인세대 존경-존중부터
- ◆ 덴마크 대학까지 전면 무상교육에 대학생에게 매달 생활비 150여만원 무상 지원 : 요즘은 미국의 대학에서도 무상교육 확대 중, 왜 그럴까?

자본주의에 대한 성찰과 자본주의의 모순 극복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시민들이 연대와 실천 중!

- ◆ 자본주의가 곧 민주주의일까요? 돈을 권리의 주체로 삼는 것이 자본주의이고, 사람을-민중을 권리의 주체로 삼는 것이 민주주의이니, 둘은 차이가 확실합니다. Capitalism을 '자본주의'로 번역한 사람도, 이것이 사람이 주인이자 민중이 주체가 되는 '인본주의 및 민주주의'와는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 자본주의나 경제가 민주주의와 사람의 가치를 훼손해선 안될 것!
- ◆ 자본주의의 여러 모순과 문제점에 맞서, 자본주의를 수정하거나 극복하고 사회혁신을 꿈꾸는 사람들 : <http://www.civilnet.net>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홈페이지 : 한국의 500여 주요 시민사회단체 및 각종 공익단체들의 상설연대기구로 다종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언제나 보실 수 있습니다.
- ◆ 하버마스가 말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자율적인 법적 공동체”는 무엇일까? 경제가 경제제민이라면 경제는 위 공동체에 기여하고 복무해야 합니다.

함께 사는 상생 경제-따뜻한 대한민국으로!

- ◆ 상생(上生)의 경제가 아닌 상생(相生)의 경제로!
- ◆ 경주 최 부자택 교훈 6가지(6훈) : 함께 가꾸는 휴머니즘 공동체
 - 1)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권력을 탐하지 말라는 뜻)
 - 2) 재산은 만 석 이상 지니지 마라(욕심을 부리지 말고 사회에 환원하라는 뜻) : 노블리스 오블리지의 최고의 모범이 아닐까요?
 - 3)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인정을 베풀어 적을 만들지 말라는 뜻)
 - 4) 흥년기에는 땅을 사지 마라(가진 자로서 없는 자를 착취하지 말라는 뜻) : 자본주의의 탐욕이 금과옥조가 되서는 안되겠죠!
 - 5) 머느리들은 시집온 후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검소, 절약 뜻)
 - 6) 사방 백 리 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상부상조의 뜻)

2019년 예산안 분야별 자원 배분

단위: 조원 %

470.5

전년 대비 증감률 8.4%

※본다림 기술개발비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분류한다



국민중심·경제강국 2020년 예산안

총 지출

2019년 예산
469.6조원

↑ 9.3%
[43.9조원]

2020년 예산
513.5조원

분야별 자원 배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27.5% [+5.2조원]



환경

↑ 19.3% [+1.4조원]



기술개발(R&D)

↑ 17.3% [+3.6조원]



SOC

↑ 12.9% [+2.6조원]



복지·일자리

↑ 12.8% [+20.6조원]



문화·체육·관광

↑ 9.9% [+0.7조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7만9000가구 확대(6000억)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3000억)

보건 복지노동
181조6000억
(12.8)

- 신남방·신북방 중심 공적개발원조(3조5000억)
- 남북 철도·도로연결(5000억)

외교·통일
5조5000억(9.2)

- 지방교부세(52조3000억)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743억)

일반 지방행정
80조5000억
(5.1)

문화체육관광
8조(9.9)

- K팝 공연시설 개선(171억)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190억)

- 고·23학년 무상교육 국고지원(7000억)
- 대학혁신지원(8000억)

교육
72조5000억
(2.6)

2020년 분야별 예산안 규모 및 주요 내용

단위: 천, 억 (단위: 천억 원 대비 증가율, 자료: 기획재정부)

환경

- 미세먼지 저감투자(4조)
- 스마트 상수도 관리시스템 도입(4000억)

8조8000억(19.3)

- 스텔스 전투기(F-35A) 등 무기체계 보강(6조2000억)
- 군 병장 월급 40만6000원→54만1000원 인상(2조1000억)

국방
50조2000억
(7.4)

총지출

513조5000억
(9.3)

공공질서·안전
20조9000억
(4.0)

- 형사공공변호인 도입(18억)
- 홍수·가뭄 등 재해발생 위험지역 정비(4000억)

- 소재·부품·장비 지원(2조1000억)
- 데이터네트워킹 투자(1조7000억)

연구·개발(R&D)
24조1000억
(17.3)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3조9000억
(27.5)

사회·간접자본(SOC)
22조3000억
(12.9)

농림·수산·식품
21조(4.7)

- 쌀·농산물 통합 공익형 직불제 도입(2조2000억)
- 어촌뉴딜사업(4000억)

- 고위험 수출시장 개척 등 무역금융 공급(4조2000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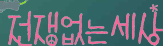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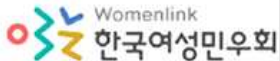
- 안전·건강·여가 등 생활SOC 건설(10조4000억)

그렇다면 2021년 중앙정부 예산은? 서울시 2021년 예산도 40조
넘어서...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예산 다 합치면 1천조에 **넘을** 것

**국난극복과
새로운 선도국가를 향한**

555조 8천억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늘을 노동공의 위해~



헌법, 노동법,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국가인권 위법은 국민들께 너무 중요! 학교에서 꼭 배워야!!

- ◆ 우리나라의 최고규범이자 우리 국민들의 권리장전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법 : 알바와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법안
- ◆ 집없는 서민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주택임대차보호법 : 현행 보호기간 2년
- ◆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임차 자영업자 및 임차상인들이기에 이분들에게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참으로 중요한 법 : 현행 보호기간 10년
- ◆ 이자제한법-대부업법도 숙지하고 있으면서 이자폭리 및 횡포 당하지 말아야
- ◆ 서울시 주택임대차 상담실-상가임대차 상담실, 또 서울시처럼 지자체와 법률구조공단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니 반드시 그곳에 분쟁이나 고충 초기부터 상담을 하시고 분쟁 조정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 소송을 하면 조정이 안되니 반드시 소송 전에 가셔야 하고요.
- ◆ 공정거래법, 소비자기본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보호법, 대규모유통업공정화법도 중요

요금징수는 철회!
피해보상은 눈치?

KT통신불통 피해시민

KT는 영업상손해
철저히 보상하라

한국가맹점주협의회

국회가 할 일은
집단소송법안 처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세계 최초 5G 상용화보다 철저한 보상, 재발방지

KT 아령기나 하체 관련 토시코공



#국회는 공수처를 설치하라
**적폐판사
탄핵하라!**
사법농단새책 규탄 및 청산촉구 국민연대

연동형비례제 도입
18세 선거권 하향
◎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

연동형비례제 도입
18세 선거권 하향
◎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

연동형비례제 도입
18세 선거권 하향
◎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

연동형비례제 도입
18세 선거권 하향
◎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

연 18세 투표권없는
OECD 유일한 나라
◎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

18세. 바꾸자 선거법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

2019년 2월 19일 (화) 오전10시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좌장 |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팀 팀장)

| 발제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토론 |

윤 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한현배 (한국공익통신협동조합)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

남 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 주최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소비자시민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영리병원
절대안돼



나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영리병원을
반대합니다!

서울민중행동(추)



분명히 판례 도움 필요없다!!
경자... 퇴출하라! 토축하...
의 종합...

가입할 때 보험약관...
보험금을 지급하라!
환자를...
대통령님!!

보험가입 할 때
약관 따로
보험금 지급할 때
약관 따로

보험사의 부지급은
명백한 보험사기
보험자는 분노한다
금감원은 불단아라

금융감독원 민원접수번호(200463345) 제 목 : 보험약관에 대한 질문

상기 약관조항에서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의 의미

약관 제 4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또는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하는 진단방법에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를 의미

민원인 질문 3 : 암환자의 기준

금감원 답변 : 동약관 제 4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하는 진단방법에 의거하여 **암으로 진단확정된 환자**를
의미합니다.

민원인 질문 4 : 상기 약관조항에서 "직접치료"의 의미

금감원 답변 : 일반적으로 상기 약과 조항의 "직접치료"란 동
약관 제 4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의한 **암 또는 상피내암**
을 치료함에 있어 의료경험직상 직접적인 관련있는 의료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말기암 또는 전이암 등 암의 전전.
전이형태와는 무관합니다.

민원인 질문 5 : 상기 약관조항의 "직접치료"

금감원 답변 : 암 또는 상피내암에 대한 직접
방사선 요법, 항암제투여에 제한되지
발병시기,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 등 개별
직접적인 치료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

금융권 탐욕과 이자폭리 문제-시중은행 1년 이자
만 40조..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행사해야 합니다!

SKT 1:09



23%

쉴메이트

orora



네 신한SOL → 전체메뉴(≡) → 조회/관리
→ 계좌관리 → 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
금리인하요구 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 가
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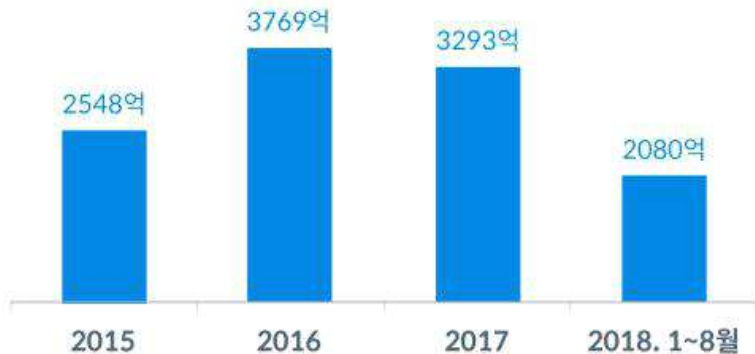
금리 인하 신청 접수 확인 후 대출 관리점
에서 고객님과 유선상담을 통해 상담 진행
되고



상담 결과 필요시 증빙자료 제출 등으로 인

시민사회는 늘 국민들 편에서 주권자, 납세자, 유권자, 소비자, 지역민들의 권리와 권익을 옹호합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 따른 이자 절감액



5.18민주화운동 왜곡 모독 망언
3인 국회의원 퇴출!
5.18역사왜곡처벌법 개정!
자유한국당 규탄!

범국민대회

2019년 2월 23일(토) 오후 2시
서울 청계광장 오후 3시부터 행진 시작



**소사장제
철폐하라!**

**백화점
수수료인하**



다수의 공익고발과 공익소송을 열심히 진행했어요!

-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발하고, 다스 비리 관련 여러 자료를 폭로-제출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청와대도 수 차례 고발.
- ◆이재용 전 회장을 고발하고, 엄벌을 촉구했어요. 효성-롯데-한진그룹등 재벌총수 비리 수차례 고발하고 계속 엄벌촉구 중
- ◆신한사태 관련 라응찬-이백순 등을 고발하고 엄벌을 촉구했어요. KT 전현직 회장들의 비리의혹들 여러 차례 고발했어요. 중기진흥공단-강원랜드등 권력층 개입 채용비리 수차례 고발도.
- ◆이동통신요금 원가 정보 공개청구 소송 대법원에서 승소했어요. 사찰 문화재관람료 반환청구 소송 대법원에서 최초 승소 확정했어요. 장애인 투표권 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했어요. 투표권은 얼마? 폭설로 인해 고속도로에 갇힌 시민들과 함께 손배소 승소했어요. 김포공항소음피해 집단소송도 승소..!!

NGO-NPO-시민사회단체-시민사회운동 활성화

- ◆ 시민단체 <나눔문화> 제시하는 현 세계와 인간의 4대 고통 : 전쟁/빈곤/질병/영혼의 불안... 폭력과 편견, 그리고 차별의 문제
- ◆ 한국 사회의 각종 문제점 : 인간의 고통, 민중의 고난, 부익부빈익빈, 유전무죄무전유죄, 천민자본주의, 교육-주거-의료-통신-이자-교통비 등 최악의 부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 ◆ NGO : 비정부기구/NPO : 비영리기구, 21세기는 NGO의 시대- 즉 시민의 시대, 세계시민주의, 공론장 및 의사소통 활성화
- ◆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자율적인 법적 공동체 - 하버마스
- ◆ 우리는 국민으로 태어나지만 시민으로 거듭난다! 일방적인 통치 대상을 넘어 나라의 주인으로-사회 운영의 주체로 :가버먼트를 넘어 가버넌스(협치)의 시대로! 주민자치센터-시민의회 등

시민의 나라 CITOPIA를 향하여!

(CITIZEN+UTOPIA=CITOPIA)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늘 국민 아래 겸손하게 위치하고,
국민들의 생존권-생명권 만큼은 철저히 보장하는
참된 민주정부는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닐 것입니다”

시민민주주의의 핵심은 정부. 지자체 정책과 예산에 대한 시
민 참여의 보장 및 시민들을 위한 정책과 예산의 수립과 집행!

이등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강사는 장애인당사자 위주로 / 온라인교육은 제한적으로』

- '기업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www.kaepe.or.kr



장애인권익지원센터

척수장애인 장기입원은 시설거주와 동일, '탈시설 개념' 확대하라!
전환재활시스템제도 마련하여 자유로운 병원 밖으로!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





2018년 10

차별금지

차별금지법제정



장년층 장애인 당사자 위원회 / 유권자의 요구

소리로 빛을 밝히는

시각장애인 합창단

RAPHAEL CHORUS

제 10회 정기연주회



지휘 이돈용



부지휘 정선희



부지휘 이송은



반주 문찬양



사회 심준구

가짜뉴스 '범람' 유튜브·광고까지

MBC

안진걸 /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NEWS
DESK

광고주들로부터 기업주로부터 훨씬 많은 광고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즐기고 있다 노리고 있다라고 강력히 비난하지 않을 수 없고...



본격 민생탐구



날 씨 (기온) 서울-1/10, 강화-4/9, 인천-1/8, 수원-3/10

초미세먼지주의보

과천 성남

#간간글

#TV민생연구소

#tbs

#ㅋㅋㅋ

#김어준의뉴스공장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회변동, 놀라운 시민들

- ◆ 2006년 타임지 올해의 인물은 바로 'YOU', 2010년 타임지 올해의 인물은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2011년 타임지 올해의 인물은 '저항자'(THE PROTESTER)-참여하는 시민들, '참여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SNS'민주주의가 도래한 것이 가장 큰 특징 : '의사소통형 민주주의' '공론장 민주주의'로 더 발전 중!
- ◆ 세계사적 변화,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이례적 퇴행으로 인해 한국사회가 큰 진통을 겪었지만,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써낸 촛불시민혁명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심화되어 갈 것임.
- ◆ 민주주의는 선거와 절차만의 민주가 아니라 '매일 매일의 민주주의' (최소한의 최선의 선택)를 의미하는 것이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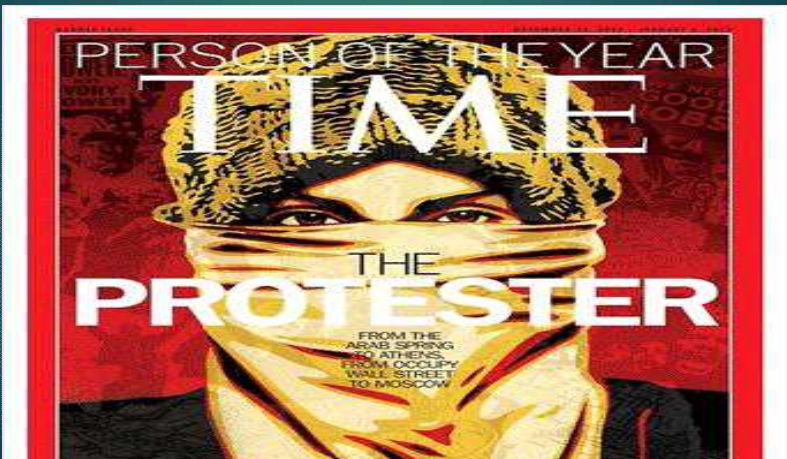
2016~17 촛불 “일어설 수 있는 분들만 일어서세요”

- ◆ 좋은 사람은 이미 좋은 세상! 좋은 세상이라는 것은 목표가 실현되는 이상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가는 과정 자체가 더 중요할 수가 있음. 모든 차별과 편견을 반대하는 이유
- ◆ 시민사회의 존재이유는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의 옹호, 인간과 못생명의 존엄성 보장, 사회경제적 약자 및 소수자들에 대한 옹호·대변·연대
- ◆ 이땅을 살아가는 저소득층, 서민, 중산층들을 위한 끊임없는 정책 개발
- ◆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복지확대와 복지국가, 오로지 민생제일주의로
- ◆ 장애인 예산 확충, 장애인 복지와 인권 증진,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확대 투쟁, 장애인이동권·교육권 실현, 탈시설 운동과 연대, 장애인 비례대표, 장애인정치인 확대 운동, 장애인시설 비리 및 사학비리 근절 투쟁과 연대, 시각장애인단체와 함께 반 볼라드 투쟁, 시각장애인들의 화폐식별 개선 요구 캠페인, 장애인 투표권 침해에 대한 공익소송 승소 등

2006년 타임지 올해의 인물은 바로 당신-여러분!
1927년부터 타임지가 선정한 이 중 최고의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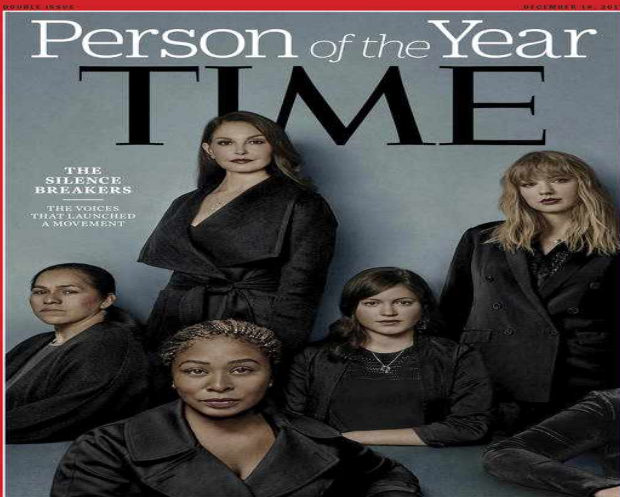
2011년 타임지 올해의 인물은 집회-시위자들!
2006년 타임지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도 선정!!



2014년 올해의 인물은 에볼라와 싸우는 사람들!
- 국경없는 의사회, 사마리안의지갑 등 NGO들



2017년 타임지 선정 올해의 인물은 ME, TOO!



2018 올해의 인물은, 가짜 말고 팩트와 진실- 정의의 위해 싸우는 저널리스트들-언론인들



2019년 올해의 인물은 환경파괴에 맞선 멋진 청년!

DOUBLE ISSUE

DEC. 23 / DEC. 30, 2019

PERSON *of the* YEAR TIME

**GRETA
THUNBERG**

THE POWER
OF YOUTH



우리는 더 좋은-더 강한 민주주의를 원합니다!

와! 이제 오늘의 명언을 모두
해석할 수 있게 되었어요!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orm the earth."**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영원할 것이라는
멋진 약속이네요.

더 좋은 민주주의는 민주-민생-평화를 늘 지향!!

- ◆ 미국의 링컨(1809~1865)대통령이 1863년 11월 19일, 미국 남북 전쟁의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주 게티즈버그의 전사한 장병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연설에서, "지금으로부터 87년전 우리의 선조들은 새로운 나라를 세웠고 ~"로 시작된 감동적인 연설을 남김. 특히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은 세계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표현이 되었음.
- ◆ 19세기의 이 연설이 21세기의 한국 정부, 한국 사회, 또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우리 모두는 성찰하고 점검해야 할 것임.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는 **Of the poor, By the poor, For the poor로 더욱 발전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Of the peace, By the peace, For the peace가 함께 실현되어야 할 것임. 그것이 바로 더 좋은 민주주의, 더 강한 민주주의, 더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인 것임.

더 좋은 민주주의는 항상 풀뿌리 시민사회 및 지방자치 활성화와 분권을 지향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지역 중소기업인 지원 확대
- ◆ 불공정상담센터 및 하도급 호민관 제도/노동권익센터 및 비정규직 4대 보험료 지원/공정위 기능과 역할의 지자체 공유 및 지자체들의 갑을 문제 해결 기능 강화/공립대학 반값등록금 및 대학생 학자금이자지원조례
- ◆ 지자체-지방의회의 민생복지기능 강화. 예)어르신 70% 통신비감면, 아동수당, 기초연금, 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청약통장-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수당 등 모두 신청해야/친환경무상급식 확산, 무상교복 확산, 청년수당 확산, 출산 및 육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공공임대 확충, 지역의료원 등
- ◆ 광장조례 개정,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공공가버넌스 확대 등 민주 발전

초등학생들도 부당한 일에 맞서고 권리 찾기를!



선배님 교명을 바꿔주세요

다들로비전
부산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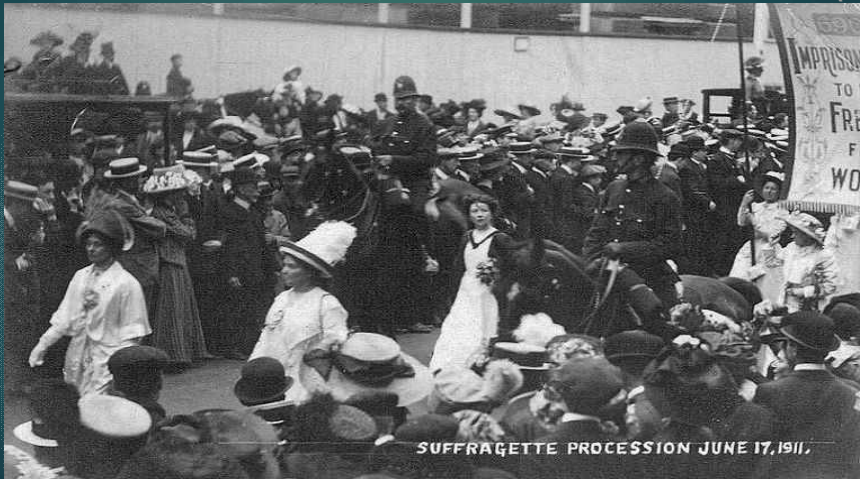
대변초등학교
Busan Daebyeon Elementary School

차준석 대변초 학생회 부회장

부산
뉴스

뮤지컬 발표회나 춤 발표회 나갔을 때 사회자가 대변초라고 소개하면
다른 초등학생들이 똥 초등학교라고 비웃거나 놀려요. 계속...

여성은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의정단상 오를 권리도 있어야 한다.
프랑스 극작가 올랭프 드 구즈, 여성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0항(1791)



SUFFRAGETTE PROCESSION JUNE 17, 1911.

세상을 바꾸는 시민들-세상을 바꾸는 여성들!

서프러제트 Suffragette

-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 영미권에서 여성 참정권을 주장한 사람들을 이르는 말. 좁은 의미로는 영국의 여성사회정치연합(WSPU) 소속으로 여성 참정권을 위해 투쟁하던 활동가들을 말함
- 영국에서는 1918년 2월 6일 21세 이상 모든 남성과 일정 자격을 갖춘 30세 이상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국민투표법이 통과되면서 처음으로 여성 참정권을 인정했다. 21세 이상 모든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된 것은 1928년 7월임

강사 이름은 안진걸 010-2279-4251

2004년 이라크 파병반대 집회 때



안진걸 : 지지 않은 걸-우리 절대 지지 말아요!
2008년 6월 25일 08년 촛불집회 때



그러다가 반기문 총장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 기도 했고요. 2015년 시사저널 조사 결과

가장 영향력 있는 NGO 지도자 (복수 응답 3명까지 · 단위: %)



2014년 조사 결과

1위	박원순	8.9
2위	이석태	6.7
3위	최정표	4.1
4위	최열	3.5
5위	이시재	3.3
6위	한비아	2.7
7위	오종남	2.6
8위	임현진	2.5
9위	유종근	2.3
10위	예종석	2.1

또 바람의 딸 한비야 선생님과도 한 기사에 나오기도 했네요. 2016 시사저널

가장 영향력 있는 NGO 지도자 (학수종합 3월차자·한류·익)

한비야 (한도파인 리서치연구소장) 7.2

한기문 (한도파인 리서치연구소장) 6.1

이갑하 (한도파인 리서치연구소장) 5.7

송상현 (한도파인 리서치연구소장) 4.3

한정영 (한도파인 리서치연구소장) 4.1

한진자 (한도파인 리서치연구소장) 3.5

한진자 (한도파인 리서치연구소장) 2.5

한진자 (한도파인 리서치연구소장) 2.5

박원순 (한도파인 리서치연구소장) 1.9

한진자 (한도파인 리서치연구소장) 1.4

2015년 조사 결과

1위	반기문	8.6
2위	박원순	4.3
3위	송상현	4.2
4위	고계현	4.0
5위	한비야	3.5
6위	정현백	3.3
7위	양호승	2.4
8위	김성주	2.2
9위	김혜정	1.8
10위	안진걸	1.7

촛불혁명은 2000년 총선연대, 08년 촛불항쟁보다 더 큰 역사! 그러더니, 2017년 시사저널 조사에선?

가장 영향력 있는 NGO 지도자

(복수 응답 3명까지 단위: %)

안진걸(참여연대 사무처장) 14.8

한비아(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장) 6.7

이일하(굿네이버스 이사장) 3.1

권태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3.1

이석태(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 2.8

송상현(유니세프한국위원회 회장) 2.2

박원순(서울시장) 2.0

손봉호(기아대책 이사장) 2.0

최정표(교수·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2.0

하태호(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2.0

2016년 조사 결과

1위	한비아	7.2
2위	하태호	6.1
3위	이일하	5.7
4위	송상현	4.3
5위	안진걸	4.1
6위	정강지	3.0
7위	최정표	2.5
7위	인명진	2.5
9위	박원순	1.9
10위	김혜지	1.4



이것은 수첩이 아닙니다

手帖

일본의 예모가 해국한
안전을 찾아낸대
한동사무처장의 수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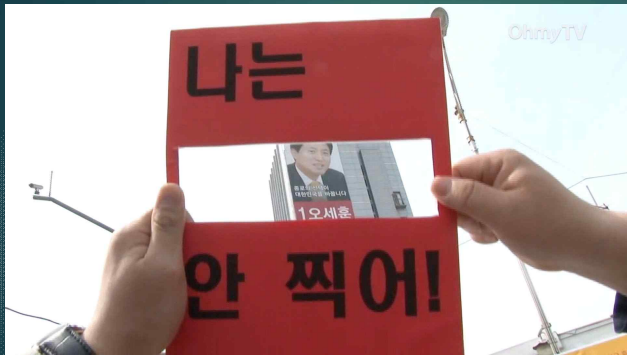
바로 쓴 족첩 足帖입니다



참여연대는 오늘도
갈등과 아픔의 현장으로 뛰어갑니다.
바로 뛰어 해법을 찾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결국 시민의 힘입니다.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회원가입 02-723-4251



2016총선넷 선정 낙선후보 35명!

👑 최악의 후보 10명
자세한 내용 2016change.net



김성동 김무성 김석기 김성태 김용남 김을동



김진태 김태을 김효재 나경원 박기준 박민식



배준영 심재철 오세훈 원유철 윤상직 윤상현



이노근 이인제 이재오 이철우 정우택 조원진



주호영 최경환 최교일 하태경 한상윤 할우여

2016총선넷 선정 "최악의 후보" 10인 KING OF KING



김석기



김무성



나경원



김진태



김을동



윤상현



오세훈



황우여



최경환



김용남

검경, 현수막집 두 군데랑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계좌와 서버까지 압수수색... 전국의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을 불법, 불순한 단체로 몰아가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

참여연대가 주도한 총선넷에서 선정한 20대 총선 낙선 대상자 35명 중 33명이 새누리당 후보 또는 보수성향 무소속 후보였다. 총선넷 배후가 누군지, 목적이 무엇인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수사 기관이 철저하게 조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황교안 국무총리



북치고 장구치고 계십니다

압수수색검증영장

[일반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영 장 번 호	2016-14974		죄 명	공직선거법위반	
피 의 자	성 명	안 진 결		직 업	2016총선넷시민네트워크공동위원장
	주민등록번호	730413-1641411			
	주 거	서울 강동구 상일로 74, 328동 701호(상일동, 고덕리엔파크)			
청구한 검사	이 성 규		변 호 인		
압수, 수색, 검증을 요하는 사유	별지 기재와 같다		유효기간	2016.6.30. 까지	
수색, 검증할 장소, 신체, 물건	별지 기재와 같다				
압수할 물건	별지 기재와 같다		작성기간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인 경우)		
일부기각 및 기각의 취지	<input type="checkbox"/> 장소 <input type="checkbox"/> 신체 <input type="checkbox"/> 물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압수대상 및 방법제한 <input type="checkbox"/> 기타 ()				

위 사건의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한다. 유효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2016. 6. 14.

판 사

성 창 로



집 행 일 시	20 . . . :	집 행 장 소	
집행불능사유			

수할 물건]

016 총선넷 ' 관련,

4선운동에 사용한 현수막, 피켓 등 낙선집회시 사용된 증거 자료

업무기록서 및 보고서, 회의록, 내부지시 문건 등 '2016 총선넷' 문서(부속서류, 전자자료 포함)

컴퓨터, 노트북, 외장하드, USB 등 저장 매체에 저장된 파일 등

후원금 모집에 사용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명의 우리은행 통장(1005-400-958244)

및 후원금 모집 및 집행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자금일보, 지출결의서, 실물전표 등)

피의자가 신체에 소지한 휴대전화(019-279-4251)

여론조사관련 구글 회신서류 일체

유권자위원회 투표결과

·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통인동) 참여연대 3층 사무처장실 내, 피의자 안진결이 사용하는 책상 및 사무 공간

서울 강동구 상일로 74, 328동 701호(상일동, 고덕리엔파크) 안진결의 주거지

피의자 안진결의 명의로 등록된 19모2241호 차량 내부

피의자 안진결의 신체(휴대전화 및 USB 등 저장매체에 한 함)



주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 시민사회단체연대회



기자간담회
총선넷 유권자 행동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 부당함을 이야기하다
주관 시민연대 주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6. 6. 23 목 오후 2시
참여연대 지하노티나루



이젠 양극화-불평등-민생고 문제 해결에 올인해야!

- 현재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 받거나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민생고, 저소득, 불평등, 불공정, 양극화, 갑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편에 서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들의 소득을 대폭 늘리는 것과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이 대부분 교육-주거-의료-통신-이자비용 등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관련법과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을 운영하는 원칙을 확고히 확립해야 함.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자살율 1위, 출산율 꼴찌, 세계 최장 노동시간 문제, 산재 사망율 1위 문제 등은 해결이 요원할 것임. 꼭 소득은 늘리고 가계 부담은 확 줄여서 인간적이고 따뜻하면서도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내야 할 것임.

저소득 노동자 및 중소기업인 살리는 정책부터!!

- 노벨 경제학상 폴 크루그만 교수 : 경제위기 상황에서 저소득 서민들을 돕는 것은 그 자체로도 도덕적이지만, 소비탄력성이 큰 서민 계층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국내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이 된다고 호소함.
- 작금의 극심한 양극화, 민생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연히 저소득 노동자들과 저소득 중소기업인들을 집중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야 함. 바로 그것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고, 그 정책은 너무나 옳으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중소기업인 계층이 있다는 것은 사실. 그래서 일자리 안정자금 상향과 수급조건 완화와 함께 반드시 중소기업인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경제민주화 조치를 병행해야 함.

을과 병들이 싸울 때 갑들은 뒤에서 웃고 있다!!

◆ 편의점주 김민철(가명)씨의 올해 5월 수입·지출 내역을 보니, 3100만원 매출이 있었지만 본사의 물품 대금 2400만원, 로열티 240만원, 임대료 100만원, 카드수수료 35만원 등을 내다 보니 오히려 72만원 적자를 봤다. 이 점포의 인건비는 250만원.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위기가 최저임금이 아니라 과당경쟁 구조, 본사 폭리, 과도한 임대료·카드수수료 등에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음.

◆ 본사는 이미 물품공급 대가로 마진을 붙여 2400만원을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왜 로열티로 무려 35%나 적용해 240만원을 또 가져가는 것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많은 가맹점주·임차상인들이 로열티·임대료·카드수수료로 각각 수백만원씩 부담하고 있기에 이 문제만 해결돼도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면서도 수익이 더 늘어날 것임.

최저임금이 무슨 죄가 있나요?! 정말 문제는...

- 일부 중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도 줄 수 없게, 최저임금 인상분도 감당할 수 없게 만든 사회경제적 조건이 문제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체적으로 과당경쟁 완화, 재벌·대기업들의 동네상권에서의 철수, 업종별 출점 및 거리 제한과 함께, 가맹점·대리점 본사들의 폭리 내지 수탈 문제, 너무나 과도한 임대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그 외 이자비용·통신비 부담 문제 등을 반드시 해결해야 함.
- 그렇게 되면 일부 중소상공인들의 임금 지불능력이 제고되어 저소득 노동자들의 임금도 늘어나고, 동시에 저소득 중소상공인들의 소득도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충분히 가능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이자비용 문제 해결 힘들게 번 돈이 순식간에 불가피한 비용으로 소진..

- ◆ 반값등록금의 완전한 실현 : 성적기준·소득기준 완화로 대학생 대부분이 국가장학금지원 받아야(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 지금은 45% 대학생들만 지원을 받고 있음. 학자금 무이자 실현, 고교 무상교육,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전국 모든 초·중·고 무상교복 실현, 아동수당 100%로 적용 확대 및 수당 증액 등
- ◆ 문재인 케어 70% 건강보험보장성 강화->100%로 나아가야, 공공의료원 및 보건소 확대, 턱없이 부족한 보건인력 확충, 기초연금 인상 및 노인요양보험 개선 등
- ◆ 전월세 상한제, 공공임대주택확충, 부동산투기 근절,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반드시 개정, 모든 지자체 주거-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가동 등
- ◆ 반값통신비 실현 : 국회 제출된 2만원 보편요금제 실현, 통신비 대폭 인하, 25% 선택약정요금할인제도 이용 확대 및 개선, 빈곤층-노인층 통신비 감면 조치 홍보 등
- ◆ 가계부채 1,400조 시대... 금융권의 탐욕과 횡포 반드시 근절해야, 가계대출-서민대출-중기대출 금리 인하해야, 전기요금 누진제 등 불합리한 부담 반드시 개선...

예) 서울시 중재로 미스터피자 상생협약 타결!

- ◆ 미스터피자 본사, 가맹점 수익 개선 위해 25개품목(연 120억) 자율구매 전환(프랜차이즈 본사가 지정하는 물품 구입의무 예외), 복지재단 설립해 매년 영업이익 10% 출연
- ◆ 미가협, 국내 최초 구매협동조합 구성해 공동구매로 수익성 개선하고, 식자재 유통마진 투명하게 개선 :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당할만한 가맹점 수익 증대 가능
- ◆ 서울시, 27차례 공식회의 등 중재진행-8.9(목) 시청에서 박원순 시장과 본사-미가협 상생협약식 진행함. 나아가 서울시는 2019년부터 이관되는 가맹점·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준비, 불공정거래 근절+상생문화 확산 다짐.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경제민주화와 상생을 위한 조치 매우 중요!!

우리 헌법도 경제민주화와 경제정의를 표방!

- ◆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 제123 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 ◆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가장 중요한 과제

- ◆ 최근 한국사회의 최대 화두는 경제민주화와 평범한 대다수 국민들의 소득 증대와 그를 통한 경제 활성화
- ◆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인, 청년, 여성을 위한 경제민주화 실현은 우리 국민들의 생존 기반을 튼튼히 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큰 동력
- ◆ 재벌·대기업만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직장 다니기 좋은 나라(노동이 존중 받는 나라), 장사하기 좋은 나라, 청년이 희망이 넘쳐나는 나라, 1%의 대한민국을 넘어 100%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 ◆ 재벌과 정경유착이 만들어낸 양극화, 불평등, 민생고, 불공정을 타파하고, 갑을 문제도 해결하고 을들의 시대를 만들어 내야. 갑을 상생-을과 병들의 연대!

미국의 힐러리는 이익공유제까지 주창

- ◆ 힐러리는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시절,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운영하는 호텔 노동자 집회에 깜짝 등장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음. 트럼프뿐 아니라 친노조 성향으로 인기몰이 중인 민주당 내 경쟁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까지 견제하는 행보라고 외신들은 평가함. 이익공유제는 힐러리 1호 공약이었음. 클린턴은 10.12일 저녁 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앞에서 열린 시위에 모습을 드러냈다. 짙은 진홍색의 노조 티셔츠에 맞춰 붉은색 상의를 입고 등장한 클린턴은 “노조를 막으려는 시도, 노동 조건을 제약하려는 시도, 최저임금만 주려는 시도에 대해 거부해야 한다”면서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노(No)라고 말할 권리를 의미한다”고 연설했는데, 노조는 이처럼 존중과 협력의 대상인 것임.
- ◆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인이여, 노조에 가입해라! 노조가 없는 곳에 착취와 수탈, 인권침해가 있다”는 취지의 명연설을 남기기도 함.

정부와 의회, 법과 제도, 정부정책과 예산에 대한 국민주권-사회적 참여 강화

- ◆ 국민들을 위한 정책과 예산은 법과 제도를 통해 구현할 수 있으므로 정부와 지자체는 좋은 정책과 예산안을 꾸준히 마련하고, 국회와 지방의회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를 끊임없이 마련해야 함.
-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이슈, 상가임차인 쫓겨나는 문제 및 건물주들의 폭리 문제,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을 포함한 갑을 문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 과도한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 부담 문제, 건강보험 보장성 문제, 금융권의 폭리 문제, 재벌·대기업들의 독점 및 횡포 문제 등도 모두 법과 제도, 정책과 예산시스템과 직결되어 있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향한 시민행동

- 시민사회는 늘 국민들과 함께! 시민사회단체들은 늘 국민 속으로, 생활 속으로 : 정부-지자체-의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정부-지자체-의회와의 가버넌스 및 협치의 확대 필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견제와 협력 증진
- 성명, 보도자료, 1인시위, 집회, 기자회견,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항의방문, 언론사 공동기획, 언론사 제보, 국회와의 공조, 정책보고서 발표 및 배포 등등 해볼 수 있는 모든 일을 통해 공론화-의제화 추진, 국민여론 조성, 그를 통한 사회의 변화와 발전 추진 : 정부-지자체-의회의 꾸준한 혁신 촉진하되 사법부-국방부-군대-종교 등도 개혁의 예외일 수 없어...

“독일-프랑스-미국헌법 1조에서 배웁니다”

- ◆ **독일기본법1조:**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책무이다. 이에 독일 국민은 세상의 모든 인간공동체와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서의 불가침이고 불가양인 인권에 대해 확신하는 바이다.
- ◆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 ◆ **일본 헌법 제1조:**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이 소재하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 ◆ **프랑스 헌법 제1조 :**프랑스는 비종교적·민주적·사회적·불가분적(indivisible)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인종·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법률 앞에서 평등함을 보장한다.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 프랑스는 지방분권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민개헌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 주권자 국민의 기본권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 ◆ **이탈리아 헌법 제1조** : 이탈리아 공화국은 노동에 기초를 두는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헌법으로 정하는 형식과 제한 내에서 주권을 행사한다.
- ◆ **네덜란드 헌법 제1조** : 네덜란드 왕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평등한 상황에서 평등하게 대우된다. 종교, 신념, 믿음, 정치적 의견, 인종, 성별 혹은 기타 그 어떤 사유에 기초해서도 차별대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 **쿠바 헌법 제1조** : 쿠바는 자주 사회주의에 의한 독립을 누리는 노동자의 국가로, 정치적 자유의 향유,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복지, 인류의 일치단결을 위하여, 통일된 민주 공화국의 형태로 공익과 공공으로써 조직되었다.
- ◆ **칠레 헌법 제1조** :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하고 권리를 보장받는 존재로 태어났다.

우리 헌법도 국민주권과 경제정의를 표방!

- ◆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 제123 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 ◆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생활임금 넘어 이제는 인간적인 노동 및 '적정임금'의 시대로 나아가야!!

- ◆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저임금으로는 경제 성장도, 노동자. 국민들의 안전과 가정의 행복도 결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저임금이 세계최장 노동시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에서는 대형 건설업체들이 기능 인력을 직접 고용해 시공하거나, 적정임금을 보장해서 건설 노동자의 일자리가 꽤 괜찮은 일자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계 등 공공분야의 일자리도 대폭 늘리고, 동시에 사회 전분야에서 직접고용.정규직 원칙과 함께 생활임금을 넘어 적정임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경제민주화이고 소득증대-소득주도를 통한 경제활성화 전략일 것!

모든 것이 최저임금 탓? 그런데 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늘어났을 까요?

- ◆ 2018 전체 자영업자 5,638,000명,
- ◆ 무급 가족 종사자까지 하면 6,739,000명
- ◆ 이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총 수는 1,651,000명으로 2017년 대비 43,000명 증가했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총수는 3,987,000명으로 2017년 대비 87,000명 감소했음.
- ◆ 최저임금 오른 것이 부담이 되고, 그것 때문에 자영업자가 다 망했다면 임금을 줘야 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숫자가 줄어들었어야 했지만, 현실은 오히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은 늘어나고,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없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매출 하락-과당경쟁-임대료 부담-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가맹본부 및 대리점 본부의 폭리 및 수탈 등의 부담이 가장 큰 원인일 것임.

검찰 공화국-그러나 우리 헌법엔 '검찰' 이 없다?

- ◆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 ◆ 제12조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검찰청법에 나온 검사들의 역할은 참 괜찮습니다.

- ◆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 ◆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그런데, 최근 검찰의 모습은 봉사자? 중립? 권한남용 금지?
- ◆ 헌법과 검찰청법 개정해 검찰 권력 대폭 축소하고 견제해야!

검찰청법에는 ‘인권, 정의, 진실, 민주’가 없다?

- ◆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 ◆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 ◆ 검찰청법 어디에도 인권, 정의, 진실, 민주, 견제, 절제, 독립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공익이라는 단어는 한번, 중립이라는 단어도 한번만 나옵니다.

그나마 형사소송법에 '인권' 이 담겨 있네요.

- ◆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 ◆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제198조(준수사항) 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③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도 폐지돼야!

- ◆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 ◆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등)
- ◆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 ◆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중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변호사법에는 인권 옹호자 역할이 들어가 있어요.

- ◆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 ◆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 ◆ 제2조(변호사의 지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검찰을 생각하면 정말 많은 일들이 떠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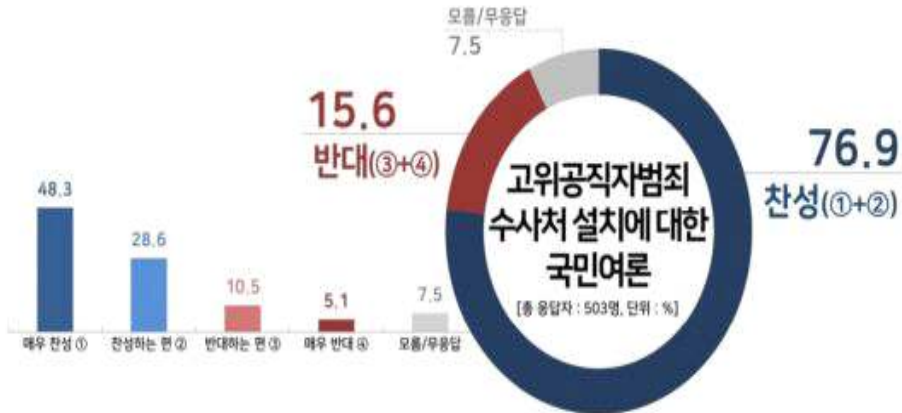
- ◆ 자기변론 노트 도입 등 최근 개혁-개선은 좋습니다.
- ◆ 피의사실공표는 죄인데,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 ◆ 검찰에게도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을 주어야 합니다.
- ◆ 검찰청법에도 검사의 직무로 인권옹호자를 추가 했으면 합니다. 현대 사회의 호민관으로서 검찰
- ◆ 또 검찰청법에 사회정의 실현의 선도자-책임자라는 규정이 꼭 들어가면 좋겠어요. 정치검찰, 공작검찰의 경우 엄벌하고 최고로 징계해야 하고요.
- ◆ 인권보호수사 준칙 개정-개선은 잘된 일입니다.

- ◆ 검찰 조사와 포승줄, 수갑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 ◆ 어떨 때는 고발인, 어떨 때는 피고발인-피고소인-피의자로
- ◆ 검찰청에 고발인 조사로 왔는데도 무섭기도 두렵기도 합니다.
- ◆ 대한항공 조현아씨 고발할 때는 그 다음날 바로 고발인 조사도(서울서부지검의 적극적인 수사 정말 고마웠습니다. 당시 서부지검장님이 누구실까요?)
- ◆ KT 이석채 전 사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는 왜 두 번이나?
- ◆ 근혜 정부 당시 집권여당 실세였던 김무성씨가 고소했을 때는 정말 겁이 나더라고요. 검찰에서 출석 촉구 전화도 여러 번
- ◆ 2008년 촛불집회로 구속 및 기소. 당시 2008년 야간집회 위헌 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해 2019년 헌재에서 위헌 판결 : 직장인, 학생들 낮에는 집회하기 어려워요. 국민의 기본권 신장!

인권보호수사 준칙 개정(2018.5.10일부터 시행)

- ◆ 피의자 소환시 충분한 시간 주고... 검사의 피의자 단독 면담도 금지
- ◆ 앞으로는 검찰이 당일이나 하루전에 피의자에게 기습적으로 소환을 통보하거나 변호사를 배제한 채 피의자를 단독 면담하는 등의 강압적 수사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개정 준칙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방어권 보장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로, 그동안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권고한 내용들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 ◆ 개정 준칙은 앞으로 검사가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법무·검찰개혁위는 제5차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원칙적으로 출석 예정일시까지 만 3일 이상의 여유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했으나, 개정 준칙에는 '충분한'이라는 문구로 자리잡았다. 개정 준칙은 또 검사가 피의자를 소환할 때 주요 죄명 또는 피의사실 요지 등 소환 사유를 알려주도록 했다. 조사 중인 피의자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을 주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혁위가 제5차 권고안을 통해 권고한 2시간 조사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하락)

공수처 설치 여론 매년 증가-국민 80%가까이 찬성



"강압수사 막는다'피의자 자기변호노트' 도입

피의자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기변호노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경찰이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피의자가 스스로 기록을 남기는 만큼 경찰의 강압수사도 줄어들 거란 평가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입니다. 질문과 답변 등 주요 내용을 적을 수 있는 메모장과 수사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구성됐습니다.

그동안 피의자는 경찰조사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만 열람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본인이 직접 기록을 남길 수 있게 된 겁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경찰의 강압수사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상훈 / 서울 용산서 수사과장> "어떤 피의자분들은 조사과정에서 정신이 없었는데 자기변호노트의 메모를 보고 본인의 진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가 메모하는 것을 금지한 건 방어권을 제한한 것이라며 메모행위를 허용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3개월간 시범운영한 결과 이용자의 만족도가 67%로 높았던 만큼 피의자뿐 아니라 수사관의 의견도 적극 반영해 전국 경찰서로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연합TV 기사 중)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

- 일시 장소 : 9. 19.(화) 오후2시, 서소동 변호사외관 5층 정의실
- 주최 : 서울지방법변호사회
- 주관 : 민주사의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진행순서
 - ▷ 사회 : 김연성 변호사 (서울지방법변호사회 사무총장)
 - ▷ 인사말 : 주최 및 주관 단체
 - ▷ 발표 :
 - 피의자 방어권 관련 국가인권위 권고 현황과 입장 : 권보은 조사관 (국가인권위원회)
 - 수사절차 방어권 침해 사례 및 피의자의 권리보장 과제 : 조수진 변호사 (범무법인 위민)
 - ‘자기변호노트’ (가칭) 소개 및 활용 제안 : 송상교 변호사 (민변 자기변호노트팀)
 - ▷ 토론 :
 - 정영운 변호사 (서울지방법변호사회 인권이사)
 - 최준영 중경 (경찰청 수사제도개편단)
 - 안진걸 사무처장 (참여연대)

검찰을 바로 잡아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 ◆ 참여연대 활동의 주요 목표 : 검찰, 국정원, 재벌(삼성) 개혁
- ◆ 검찰과 언론이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선다고 늘 얘기
- ◆ 참여연대, 그때 그 사건 그 검사들 명단 및 책자 발표로 검찰감시
- ◆ 사법부의 독립과 검찰권의 독립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와 공정한 행사를 의미하는 것이지 국민의 통제와 민주주의, 상식과 정의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임
- ◆ 검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신은 다 근거가 있음. 그것은 최근 공수처 설치에 대한 압도적 찬성 여론으로 드러나고 있음.
- ◆ 최근 윤석열 정치검찰 사태, 간첩조작 사건, 고발사주 공작 등으로 검찰 불신 확산, 동시에 검찰 개혁에 대한 기대도 커짐.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대상 사건 선정

- ▷ 김근태 전 의원 고문 사건(1985) ▷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1986)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 ▷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 ▷ 신한금융의 3억 원 제공 의혹 사건(2008·2010·2015)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 ▷ 삼례 나라슈퍼 살인누명 사건(1999) ▷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사건(2000)
- ▷ <PD수첩> 사건(2008) ▷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2012) ▷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 ▷ 장자연 리스트(2009) ▷ 춘천 강간살해 사건(파출소장 딸 살인사건, 1997) ▷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1990) ▷ 정연주 KBS 사장 배임 사건(2008) ▷ 용산지역 철거 사건(용산참사, 2009)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

‘정치검찰’.

정권 실세나 재벌들에게는 부실수사,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에게는 과잉수사의 칼을 휘두릅니다.

2014년 정윤석 국정개입 의혹사건을 무마시킨 것도 청와대와 검찰이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공정하게 수사했더라면

이 초유의 국정농단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특검이 하는 수사, 검찰도 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국민이 직접 통제해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참여연대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① 셀프수사는 이제 그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깨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근,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
검사들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도입해
쫓값을 제대로 치르게 해야 합니다.

② 정권 말고 국민의 눈치를!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 직선제 도입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권을 국민에게 주어야 합니다.
전국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18석을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권력이 아닌 유권자, 즉 국민의 눈치를 보게 하고,
검찰권 행사에 따른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③ 검찰은 검찰 업무만 집중! 청와대 편법파견 금지와 법무부 탈(脫) 검찰화 추진

검찰이 정권의 도구로 쓰이지 못하도록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지만, 검사를 사직하고
청와대 근무 후 다시 재임용하는 편법은 여전히 있습니다.
법무행정 기관인 법무부의 요직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법적인 청와대 검사 파견을 금지하고,
법무부 요직을 검사들만 맡게 하는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참여연대’ 텔레그램도 친구추가하면,
정기적으로 참여연대의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www.peoplepower21.org

“민심은 천심=박근혜 정권퇴진운동”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촛불시민혁명! 박근혜 정권 퇴진-적폐청산의
전 과정, 시민들이 시작했고 시민들이 주도
했고 시민들이 마무리-지금도 혁명의 완수를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전국 곳곳에서 계속
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4.19에서 부마항쟁과 5.18로, 5.18에서 6월
항쟁으로, 그리고 미완의 혁명 6월 항쟁을 최근
촛불시민혁명이 1차로 완성! 이제는 지역시민
단체, 노조, 정당, NGO 강화로 나아가야!!



[두 개의 큰 의미 있는 상]

1,700만 촛불, 2017
프리드리히 에버트 인권상
수상자 선정(10.16일 발표)

용산화상경마장대책위원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NGO상' 수상(10.27일 발표)





촛불 계속

은된다

촛불
1주년
대회

2017년 10월 28일(토)
저녁 6시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노동농민회

bisang2016.net [bisang2016](#)

*당일 사전행사 신청 candle20161029@gmail.com

시민들과 함께한 촛불항쟁, 시민들이 만들어낸 청와대 촛불행진/ 블랙리스트 관련 법적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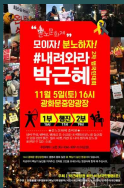


청와대 부근 행진을 금지한 경찰 상대 행진금지 가처분 6연속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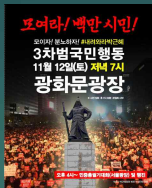




3만
(2016.10.29
서울만 3만)



전국 30만
(11.5
서울20만)



110만
(11.12
서울100만)



96만
(11.19)



190만
(11.26)



232만 1천
(12.3)



104만 3천
(12.10)



77만 3천
(12.17)



70만 2천
(12.24)



110만 4천
(12.31)

2016년
촛불집회
참가자만
연인원 무려
10,233,000
여명 참여

2016.10.27일부터 2017.3.13일까지 평일 촛
불집회도 계속 했어요. 각종 시민참여 행사도!





전국64만 4천
(2017.1.7)



14만 7천
(1.14)



35만 3천
(1.21)



42만 6천
(1.28설날
2.4일 개최)



80만 6천
(2.11)



84만 5천
(2.18)



107만 8천
(2.25)



30만
(3.1절
서울)



105만 1천
(3.4일 헌재 탄핵
전 마지막
촛불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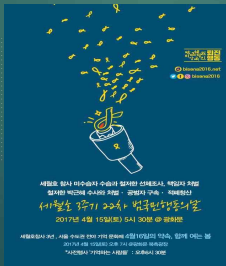
70만 8천
(3.11일
탄핵 후 첫
촛불집회)



10만
2천(3.25일
21차)

10만 5천
(4.15일 22차)

- ◆ 2016년 10.29일 1차 범국민행동 집회가 시작되어, 2017년 4.29일 23차 범국민행동 집회로 마무리 될 때까지 총 23회의 탄핵 심판 전인 19차까지 연인원 총 15,882,000여명, 최종 23차까지 총 16,852,000여명 참여함. 위대한 촛불시민혁명!
- ◆ 평일 · 일부지역 · 법원·삼성·국회 앞과 새누리당 앞 등의 참여인원은 따로 합산하지 않음. 그래서 실제 참가자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임.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촛불집회였고, 부패한 최고권력자를 끌어내리고 세상을 바꾸어냈음!



마지막 4.29일
촛불집회
5만(23차)



공공의창·우리리서치·참여연대 조사결과/서울신문 여론조사 결과

- 2.21일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32.4%가 촛불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답함. 2017년 1월 기준 대한민국 인구 약 51,704,332명에 대입 시 17,217,539만명 가량(1/3기준)이 참여 : 한번 이상 참가했다고 대답한 국민들이므로 이중에서 여러 번 나온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누적 연인원은 이보다 더 많을 것임.
- 이 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은 탄핵사유가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도 국민의 76.3%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또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72%가 긍정적이고 답하고 있어, 촛불혁명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도와 지지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을 것임.
- 2016.12.28~29일 실시한 서울신문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5이상이 (23.2%) 그 동안 촛불집회 참여했다고 답함 : 당시 퇴진행동의 촛불집회 인원추산도 연인원 1천만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어 인원 분석 일치.

내일신문-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조사

- ◆ 2016년 11월 26일 광화문촛불집회 참가자 2,058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 누구나 얘기했듯 친구나 직장동료, 가족단위 참가자들이 80%가 넘고, 혼자 온 사람들도 13.4%에 달해 : 나중에 이분들은 "혼자온사람들의모임" 결성도 또한 뉴스를 보고 스스로 판단했다는 국민들이 80.5% - 자발적 시민혁명



정치를
바꾸기 위한
3가지 제안

정치를 바꾸려면, 시민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선거법부터 바꿔요

① 유권자의 말할 자유 보장

탄핵 결정으로 대선이 본격 시작되면,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제한됩니다.

현행 선거법은 무려 선거 6개월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유권자들의
의사표현을 규제하고 인터넷실명제,
후보자비방죄,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후보자 검증도 어렵게 만듭니다.
운동 '하지마' 투성이 선거법
대선 전에 바꿔야 합니다.

② 18세 투표권 보장

사회 곳곳에서
청소년들이 당당한 주권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민주주의와 기본권을 말하고,
사회변화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권이 없는 이들의 목소리는
얼마나 정치에 반영되고 있나?
청소년들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도록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야 합니다.

③ 정당득표율만큼 국회 의석 배분

1등 승자독식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투표하고도 버려지는 천 만표.

정당 득표율만큼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정부지정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해로아미대 친구추가하면,
정기적으로 참여연대의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2017. 1. 7.



“시민들이 시작했고, 시민들이 주도했고, 시민들이 끝냈고,
더 좋은 세상을 향한 시민들의 저항과 참여는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촛불혁
명! 4.19에서 5.18로, 6월 항쟁에서 촛불혁명으로!!



5.18-6월 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꼭 좋은 개혁과 더 좋은 정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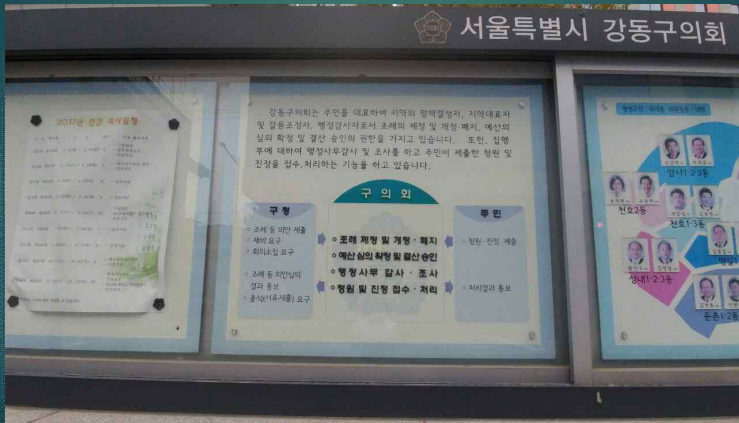
“우리나라 국민들과 같은 국민이라는 사실이 참 고맙고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

- ◆ 2016년
12월 18일
- ◆ 중국CCTV
뉴스 인터뷰
방송 캡처

“집회
조직자”
안진걸 올림



지방자치는 우리모두가 함께 키워나가야 할 귀중한 주민정부-주민정치의 영역! 주민자치센터, 얼마나 혁명적 개념인가!! 그런데 현실은? 기초의회-광역의회에 주민참여 실태는?



지방정부-지방의회 소식을 속속들이 알려줘야!

금연통신폭소

금연통신폭소

하남시 시정소식을
휴대폰 문자로 받아보세요!

주최: 하남시
목요일

시민 참여, 각종신청, 복지, 문화, 축제, 교육 등
우리시의 다양한 소식을 휴대폰 문자로 받아보세요.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민소식
회영시민 누구나
· 하남시청 및 하남뉴스 홈페이지
(시민참여 문자서비스 신청)
· 각 부서 및 각종 주민센터 발령 시
(사전신청)
· 상급과 휴대문 번호만 입력가능

문의 하남시청 시정홍보팀 031-790-6066, 5488

일자를 구하십니까?
직원을 찾으십니까?

내게 딱 맞는 일자리부터
내게 꼭 필요한 인재까지
하남일자리센터가
한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ONE STOP! TOTAL CARE
하남일자리센터
(031) 790-6890
하남시청 본관 1층 / hn.intoin.or.kr

- 여성, 노인, 장애인, 청년 등 계층 및 분야별로 분산되었던
지원서비스를 one-stop 서비스로 대폭 강화합니다.
- 경기도 31개 시·군센터와 온라인센터, 콜센터와 연계하여
연세, 여대생, 누구나 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자리 발굴과 취업교육, 상담 및 지원은 물론, 사후관리까지
취업 전 과정에 대한 일직서비스로 취업성공률을 높여줍니다.
- 복지와 일자의 지원의 융합을 통해 사회적대가 없는
Total CareSystem이 구축됩니다.

하남시 Hanam city

시민의 행복이 중요합니다

모든 규제는 암덩어리? 꼭 필요한 사회적 장치?

- ◆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규제 철폐나 완화로 빚어진 참상 <WORST11>(참여연대 발표)
- ◆ 1) 카드사용 한도 규제 폐지 : 신용카드 대란과 신용불량자 양산 사태
- ◆ 2) 저축은행의 제로베이스 규제완화 : 저축은행 사태와 서민 피해
- ◆ 3) 중소기업 고유업종 규제 폐지 : 대기업의 중소기업인 적합업종 침탈 가속화
- ◆ 4) 재벌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 규제 폐지 : 재벌대기업의 문어발 확장과 경제력 집중 심화
- ◆ 5) 대형마트 진출허가제 규제 폐지 : 대형마트·SSM의 장악으로 지역 경제 파괴 및 변종 SSM 난립
- ◆ 6) 정리해고 규제 완화 : 대량해고의 일상화와 노동자들의 고통 심화, 그리고 만성적인 고용불안정
- ◆ 7) 비정규직 사용규제 완화 : 기간제, 파견 등 비정규직 만연과 노동조건 악화
- ◆ 8)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해제 : 도시의 연접화, 난개발, 그리고 환경 파괴
- ◆ 9) 분양가상한제 및 무주택자 우선분양제 폐지 : 부동산투기 만연과 서민 주거불안 심화
- ◆ 10) 사행성 게임의 규제 완화 : 바다이야기 사태와 도박공화국 문제
- ◆ 11) 이자제한법 폐지 : 대부업 창궐 및 '폭리 공화국' 사태

최악의 예산 낭비 사례 : 사-자-방 혈세탕진 과 최순실 예산-국정원 예산 전용 사건

- ◆4대강 사업 : 환경파괴로 4대강죽이기
- ◆자원외교 사기사건 및 혈세 탕진 사건
- ◆방산비리로 국방 예산 혈세 탕진
- ◆박근혜 정권 비호 최순실 예산 사기 사건
- ◆국정원 예산 전용 및 국고 손실
- ◆국회 특활비 등 각종 특수활동비 문제
- ◆국회의원, 지방의원 들의 외유성.뇌물성 해외 출장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예산 운동

- ◆예산 낭비 방지, 혈세 탕진 예방
- ◆좋은 예산, 민생 예산, 노동 존중 예산, 일자리 예산, 복지예산 확대
- ◆조세 정의 및 조세 형평성 제고를 세수 확충
- ◆최근의 종교인 과세, 법인세 정상화, 임대소득 과세 강화 등
- ◆재벌 대기업 및 큰 부자 증세를 통한 재정 확충
- ◆재정확충을 통한 제대로 된 민생-복지 예산 증액
- ◆주민 참여 예산 조례, 국민 참여 예산 제도
- ◆주민 소송법, 국민소송법(예산부정방지법) 등

문제 예산을 민생을 위한 양질의 예산으로!



예산참여-재정감시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들

- ◆ 고교까지 무상교육 실현,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 ◆ 반값등록금 실현 : 국가장학금 도입 및 개선
-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아동 수당 도입(2018.9월 시행)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기초연금 인상
- ◆ 빈곤층-저소득 노인세대 통신비 감면 제도, 보편 요금제
- ◆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문재인 케어”를 넘어
- ◆ 장기 저렴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연합 공공기숙사 신축
- ◆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 불공정상담센터 운영
- ◆ 행정-입법-사법부의 특수활동비 공개 및 폐지 운동

예산참여-재정감시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들 2

- ◆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실시
- ◆ 요즘 핫 이슈 : 무상교복 도입 운동
- ◆ 청년수당(구직 지원 수당) 도입 운동(성남시/서울시)
- ◆ 무상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
- ◆ 공공의료원 확충 및 보건소 확대
- ◆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 ◆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정규직 4대 보험료 지원, 노동권익센터
- ◆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그렇다면 문화재관람료는?
- ◆ 공공부문 서비스 확대 및 일자리의 획기적 증대 등등

2012년 생활임금이 최초로 지자체에 도입!



삼성그룹 이재용 탈세에 맞선 국세청 앞 1인 시위



2001년 구청장 판공비 정보공개처 분 취소 소송 승소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감시합니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니다



**PEOPLE
POWER**
시민의 힘으로!

촛불시민혁명과 지역운동 활성화로!

- ◆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더욱 강해지고 튼튼해지려면 정당, 노동조합, 농민회, 청년단체, 시민단체, 풀뿌리ngo, 지역시민사회 및 동네시민모임등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함. 전국곳곳 시민단체 또는 크고 작은 시민모임 발전과 참여하는 시민들이 확대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임.
- ◆ 지역마다 구호와 회원가입, 시민참여 요령을 안내하는 현수막 및 선전벽보를 적극적으로 내걸고, 다종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시민들의 이슈, 지역 이슈, 생활 속의 이슈로 더 뛰어 들어가야 할 것임.
- ◆ 최근갑을문제, 동물권, 생협, 마을만들기,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상가및주택임차인 문제, 동네 프랜차이즈 문제 등

촛불시민혁명이 풀뿌리 시민혁명으로!

- ◆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어떤 시민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그것을 안다고 해도 시민단체들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를 잘 모르고 있음. 시민단체들에 누구나 회원가입하고 자원봉사나, 후원참여가 가능하다는 것, 우리지역에 어떤 NGO-NPO들이 있는지 적극 홍보하고 주창해야 함. 또, 지역의 공익적 이슈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제기하기!
- ◆ 저번 충북도의회 파문처럼 지역 엔지오들이 할수 있고 또 꼭 해야할 지역권력 감시 및 지역민주화 이슈는 여전히 매우 중요하고 주민들 지지와 호응, 참여 이끌어낼 수 있음. 지자체, 지방의회, 지역정치, 지방권력 개혁운동 전개 : 주민참여 확대와 모든 행정의 투명성 제고, 예산낭비 감시, 지역복지확대, 권력남용 근절,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등

지역운동이 할 일들-인도 없는 살벌한 도로;;



적폐 청산과 사회 대 개혁으로!

“무엇보다도 민생과 노동이 존중 받는
참된 민생민주주의, 국민들의 참여가
전면 보장되는 참여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가 실현되는 평화민주
주의, 시민이 주인 되는 시민민주주의
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요!!”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인간이 존엄하고 노동이 존중 받고 땀 흘려 일하는 서민들이 대접받는 좋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요! 공기업 채용 비리나 헬조선 같은 슬픈 용어는 통용되지 않는 상식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요!!” “교육-주거-의료-통신비 부담 없는 세상 꼭 만들어봐요. 시민단체들도 계속해서 시민들 속으로!”